

서울시 산업개발진흥지구 오는 7월 지정 시범지구 지정에 인쇄업계 지정 여부에 촉각

서울시는 지난 연말 IT, BT, 금융 등 서울의 신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정 업종이 이미 몰려있는 곳이나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 준공업지역 또는 신규 개발지 가운데 일정 면적 이상을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감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로드맵을 밟고 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인쇄 및 출판업종을 비롯해 IT, BT, NT(나노기술), 의류·패션 등 공업 기능 중심지를 재편하게 되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디지털콘텐츠, 금융·보험, 사업 서비스 등 비공업 기능 중심지를 재편하게 된다. 이들 산업·특정지구는 해당 지구별로 지정된 권장업종 관련 부동산에 대해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구세인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받게 되는 등 향후 관련업계의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① 지구지정 후보지의 선정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자치구로부터 지구지정 대상지 신청을 받아 서울시의 전략산업 육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② 타시·도의 관련지구 지정현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정현황이 없으며, 산업개발진흥지구는 9개 도(광역시는 없음)에 총 59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다만, 지구지정 목적이 농공단지 등의 시설 설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지구 내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 사항은 없다. 실질적인 용도지구로서의 개발진흥지구 도입은 서울시가 최초이며, 향후 산업공간의 체계적인 육성관리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③ 지구지정 대상지 면적기준

지구지정 대상지 면적은 산업클러스터로서의 최소면적 확보를 위해 8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중·소 규모의 공장 이적지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5천㎡ 이상의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이보다 넓은 면적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1개 지구에 권장업종 2개 이상 지정 가능

각 지구 내의 권장업종은 2개 이상의 복수지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는 중점 육성업종인 주업종과 연관업종인 부업종으로 나누어 지정하게 된다.

⑤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세부요건

지구지정 후보지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안)은 업종요건과 활력요건으로 나뉘지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종요건: 권장업종, 서울시 전략산업 등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활력요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

대상지역내 권장업종 종사자수 또는 성장률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 대상지역내 공장부지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 시장이 특히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육성하고자 하는 지역

기본요건을 충족한 후보지 가운데 우선순위를 판별하기 위한 요건(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산업의 발전가능성(산업집적효과, 성장잠재력, 지역발전 기여가능성), 대상지역의 적합성(교통접근성, 산업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정도, 업종의 분포 및 특성), 추진주체의 육성여지(신청기관(자치구 등)의 육성 계획), 서울시 4대 산업벨트와의 연결성,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판별하게 된다.

⑥ 지구지정 대상지 선정 과정

공정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실무위원회에서는 지정 후보지의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 판별요건에 따라 대상지 선정 심의를 하게 된다. 대상지 선정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 지구지정 대상지를 선정한다.

⑦ 지구내 지원사항은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지구내 지원은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지역 및 권장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구별로 수립하는 진흥계획에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⑧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 추진과의 관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준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 등 기타 용도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업종별 클러스터를 추진할 경우에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⑨ 지구지정후의 사후관리

지구지정 후 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관리하기 위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진흥계획에는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세부지원방안, 지구의 육성·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등 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지구별 진흥계획의 추진실태 점검을 위해서 구청장의 자체 평가와 시장의 종합평가를 추진할 계획이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집행상황 및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진흥계획 결정 후 5년 시점(필요시 수시)에 진흥계획의 적절한 이행여부에 대해 종합평가하여 추진미흡 등으로 지구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 인터뷰 / 선종길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마케팅지원팀장

“서울에 5곳 지정 인쇄지구 계획안 나오면 검토할 것”

특정산업지구 지정과 관련된 일정은 말씀해 주시지요.

2월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3월에는 조례를 뒷받침하는 규칙 및 시행령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후 각 자치구를 상대로 사업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 후, 7월에 시범지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해당 관련 지구의 진흥 계획안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이 일정은 최종 확정은 아니며 향후 상황에 따른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개발진흥지구 사업의 의의와 시청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각 자치구에서 책임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과 예산의 지원 등이 시청에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지구와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각 자치구의 몫이며, 심사 과정은 각 자치구가 제출한 산업지구 사업계획을 일부 공무원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중, 3중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따라서 과거와 같은 소수의 담합으로 진행되는 밀실 행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쇄업종은 충무로, 방산시장 등 도심지역에 밀집된 상권을 이루고 있어 이번 산업개발 진흥지구 사업에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단정하기에는 이르겠지만 인쇄업이 이번 시범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이번에 시범지구로 선정되는 곳은 모두 5곳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업종이라도 특혜를 준다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할 어떤 기획이나 행정조치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인쇄업종이 시내에 밀집된 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충무로, 방산 시장 등 인쇄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가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아래 투명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서울시에 추진한 이번 사업의 성패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전개할 예정인 사업은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입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 사업은 이미 다른 지방에서도 있어 왔지만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은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의 산업 지구 가운데 일부 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사실상 공터로 비어 있는 등 의욕만 앞선 기획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획과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의 성패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자치구와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몫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